



사진 조승진

축하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택배노조 노동자들이 본보기를 보여 주다

관련 기사 11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기후 대책

3면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4면

정부·오세훈의 공급 계획
공급 증대가 오히려
가격 상승
부추기는 모습

4면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6~7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9~10면

전국택배노조
투쟁의 승리

11면

가다 서다 애태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투쟁

12면

국제

영국 트랜스젠더 지지 시위 5면
프랑스 지방선거와 파시즘 세력 5면
영국식 반보수 연합? 10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임준형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본래 국적도 유지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법무부는 이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900명이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



이주민이나 그 자녀가 원한다면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집트 출신 난민 메리 다니엘 씨의 아들. 6살인 아이는 한국에 태어났는데도 국적이 없어서 여러 사회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다. 3900명 중 94퍼센트가 중국 동포와 화교의 자녀라고 한다.

문화

그러자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며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하 청원)에 약 31만 7000명이 동의해 논란이 일었다. 황교안과 안철수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준석은 당시 진행하던 국민 의힘 당대표 선거 TV 토론에서 기술

이민이나 투자이민 외에는 엄격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청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한국의] 문화를 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 고유 문화’가 있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문화는 섞이기 마련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일상적인 복장과 음식부터 음악과 미술 등 각종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유래한 것이 상당히 많다. “한민

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민족 내 계급적 차이를 감추는 구실을 한다.

오히려 개정안은 대상이 너무 협소한 것이 문제다. 이미 한국에는 적지 않은 이주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19세 이하 외국인은 약 12만 7000명이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도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나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각종 제도와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민이나 그 자녀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이다. 이들은 산재 위험,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값 등 내국인 노동자 대중이 겪는 고통을 더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 국적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돼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 대중과 단결해 투쟁하기도 좋다.

문재인 정부는 6월 28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려해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 반발에 타협해 개정안의 국적 취득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 후퇴하려 한다면 이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들이 원한다면 쉽게 국적을 취득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의 국민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난민들은 출국당하면 모국에서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난민 심사

절차도 보호소에 구금된 채 진행된다.

진정서에는 구금된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생생히 담겼다.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을 나갈 수 있지만, 30분 후 바로 방에 들어와야 해요.”

“아픈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병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 많은 경우 1인 격리실로 보내진다.”

“여기 음식은 형편없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이 없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 20분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사워할 때도 뜨거운[뜨거운] 물 시간 적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고주소[교도소]예요.”

“직원들은 우리가 옆방 사람들과 인사도 못 하게 한다.”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선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경찰이나 119 등 다른 기관들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눈속임

23일 법무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정한 사실만 봐도 보호소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구금된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눈속임인 듯한 부분도 있다.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인 기준 1일 급량비(급식 예산)가 5398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군인 1인 1일 기본 급식비 8790원의 약 61퍼센트 수준이다. 2019년 교정시설 성인 수용자 1일 급식비 4616원에 더 가깝다.

야외 운동 시간은 원래 30분씩 주 5회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

난해 8월 중순부터 30분씩 주 2회로 줄였다고 한다. 1년 가까이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불가피하지도 않다. 법무부는 남녀 각 2개씩 4개 운동장이 있고 보호실별로 야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대한변협)’를 보면, 화성보호소에는 45개 보호실이 있다. 동시에 4개 보호실이 교대로 운동장을 사용하면, 모든 구금자들이 하루 30분씩 야외운동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부는 1일 3회 총 6시간의 온수를 제공한다고 “충분한 목욕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밝힌 3회의 온수 제공 시간은 모두 식사시간과 겹친다. 이를 제외하면 1회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시설파괴나 직원 폭행, 자

해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감 사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던져야 할 물음은 왜 미등록 체류를 감수하고 일하러던 이주노동자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온 난민이 보호소 안에서 자해 행위까지 하게 되는지여야 한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이토록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아야 할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땀 흘려 일하거나,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을 뿐이다. 오히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 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땅 투기 의혹 등 부정부패로 앉아서 돈 방식에 오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 아닌가?

미등록 이주민을 모두 합법화하고,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돼야 한다.

임준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장호중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전문가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들을 보면, 정부 목표는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2018년보다 97퍼센트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그것도 ‘제로’에 가깝게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세계 11위 규모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국을 막으려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그러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퍼센트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4월에 개최한 기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 목표를 따를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다. 바이든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데, 미국보다 탄소 규제가 약한 나라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발을 맞추려는 시도인 듯하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 부문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 방안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7곳 남겨 두는 안이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1900만 톤이다.

다른 안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러나 두 안 모두 가스 발전소를 계속 운영한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9200만~1억 톤에 이른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97퍼센트나 줄이겠다는 것일까?

정부는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연간 탄소 8500만 톤을 제거하겠다고 한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석탄화력 발전소 등 탄소를 배출하는 굴뚝에 포집 장치를 달아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현재 실험 중이다. 다른 하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것(DAC)인데, 이 기술이 극도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중 농도가 0.04퍼센트에 불과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 부문에 이어 배출량이 많은 산업, 수송, 건물(건축과 냉난방)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전기화’해 탄소 배출량을 각각 83퍼센트, 98퍼센트, 86퍼센트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이 계획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한다. “서울 면적의 10배”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것이라며 태양광 설치로 숲이 파괴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다.

현재 한국의 생산 방식을 고스란히 뒷받침하려면 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 지금처럼 이윤을 쫓는 민간 사업자에게 재생 에너지 사업을 맡기면 숲이 파괴되고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도 벌어질 것이다.

전기화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하고 제대로 감시하면 그런 피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전국의 골프장을 합하면 서울 면적의 60퍼센트가량 된다. 전국의 아파트 면적은 서울 면적의 1.7배가량 된다. 도로 면적은 서울의 3곱절이나 된다. 이 밖에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대량 생산·설치로 효율을 높이면 실현 가능성은 더 커진다. 무엇보다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는 기후 위기를 멈추고 인류 전체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도 더는 기후 위기를 부정하지 못한다. 또, 미국의 무역 장벽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에 호응하는 모양새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탄소중립 시기를 몇 년이라도 더 미루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국내 핵심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 자본가들에게 경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관점을 대부분 수용한다. 그래서 로드맵에 따르더라도 2050년에 핵발전소는 상당히 많이 운영된다. 핵발전 비중이 7퍼센트로 줄어든 것이라고 하지만, 전체 전력 생산량이 2.3배로 늘어나므로 실제 핵발전소의 발전량은 상당한 규모로 유지된다.(2018년 133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88테라와트시로 감소)

게다가 이번엔 나온 계획은 30년 뒤의 목표뿐이다. 그 사이에 한국 대통령은 6번, 미국 대통령은 최소 3번은 바뀔 것이다. 탄소 중립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중간 목표들은 그때그때 ‘조정’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파 야당 사이의 차이는 30년 뒤냐 35년 뒤냐 하는 수준의 차이일 뿐이다.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60년 뒤로 미룬 ‘탈핵’이나 30년 뒤로 미룬 ‘탄소중립’이나 책임질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

보아, 로드맵 실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도 명시돼 있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완전히 공허한 계획이다.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기껏해야 바이든이 그랬듯(관련 기사: ‘지배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노동자 연대> 371호) 정부 지출은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계획이 수정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드맵에는 산업 전환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거론되지 않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전환’이니 ‘정의로운 전환’이니 하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을 흘리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해고

를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로드맵 실행을 민간 기업들에 의존한다면 그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가 되기 쉽다. 이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배, 우편, 보건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태도를 봐도 알 수 있다.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 인상도 뒤따를 것이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비용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게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공격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기후 운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용어설명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물론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CH₄) 등 여러 종류가 더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다른 온실가스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탄소’ 배출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넷 제로’라고 말할 때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립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이를 탄소중립이라고도 쓴다.

P4G 서울선언문 “노력한다”는 말만 가득한 공허한 선언

5월 30~31일에 열린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강조한다”, “노력한다”, “독려한다” 등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뻔한 표현들만 잔뜩 담겼을 뿐이다. 주최 측인 문재인 정부도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약속만 했다.

한편 “상업적 확산”, “민간 자금 유입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등 신뢰하기 어렵고 기업 이윤을 우선시하는 대안들이 강조됐다. “시장 기반의 해결책”은 세 차례나 언급됐다. 바로 그 시장이 지금의 기후 위기를 낳은 주요 원인인데 말이다.

시장은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낳지만 그것을 복원하는 데에는 아무 쓸

모가 없다. 이윤 축적 경쟁은 사회의 극소수인 자본가들만의 이익에, 그것도 단기적 이익에 골몰하도록 만든다.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시위대에는 경찰을 투입해 항의의 목소리를 억누르더니, 선언문에서는 역겹게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썼다. 누가 이 따위 선언문을 존중하겠는가.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김승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실은 기존 질서의 선을 넘는 것에는 언제나 조심했다.

예컨대 2006년 현대차그룹 정몽구를 900억 원대 횡령과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할 때, 최대 수혜자이자 공모자였던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을 때, 그는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노무현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때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다.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예우 같은 기성 질서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지만, 옛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사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우파나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는 일은 없었다.

사실, 윤석열이 27년을 재직하고 최고위직까지 오른 검찰은 한국 국가의 핵심 기관으로 보수적이고 억압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우파의 위기에서 반사이익 누린 윤석열 그러나 별 새로운 것 없는 보수주의자

며 부패하기까지 한 기관이다. 그가 책임 있는 검찰 직책에 있는 기간 터져 나온 검찰 내부 부패 의혹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친시장

윤석열은 대선 캠프 1호 영입 인사로 이석준을 발탁했다. 이석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모피아(친기업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 일원으로 불린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중용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 부처들의 차관을 연이어 지내고 장관급인 청와대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다.

이석준은 최근에 모피아 선배인 변

양호 등과 함께 경제정책을 다룬 책을 냈다. 그 책은 규제완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이룰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다. 변양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건(2004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당시 변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법원이 결국 행정관료의 업무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무죄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검찰 수사팀에 윤석열이 있었다.

윤석열은 사회 상층부의 엘리트들을 만나 왔다. 그중 4월에 노동문제 전문가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만난 것과 외교·안보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를 만난 일이 주목을 받았다.

김성찬은 전형적인 친미 우파다. 정승국 교수는 “엘리트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론과 직무급제를 주장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주들이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며 노동계급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는 ‘이론’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노동계약을 추진할 때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

윤석열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국가

책임보다 기업 지원을 강조한다.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하고, 청년 일자리는 역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을 추진했다며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우파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온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이라며 입당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당장 입당하지는 않을 듯하다. 박근혜·이명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다 받은 소신과 박해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전격 입당은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반(反)문재인층을 최대한 결집시켰다는 계획이다(선외연 확장).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에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것이 한 사례일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층을 최대한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대표에 당선시키는 등 당의 이미지를 바꿔 윤석열 조기 입당을 위한 판을 깔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만만찮게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긴장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윤석열의 반문재인 세력 결집 시도는 국민의힘의 중도 외연 확장의 일부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부패에 대한 환멸을 이용해 우파를 강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정선영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진하는 시장주의적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올해 2·4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 주택 32만 호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하고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을 높여 주겠다고 했다.

오세훈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5월에 재개발 관련 규제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 호를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와 오세훈이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주택은 중복된 것을 감안해도 대략 50만 호에 이른다. 분당 신도시 5개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와 오세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정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참여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오세훈의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오르는 집값이 보여 주듯이, 이미 주택 시장이 투기의 장이 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투기에 기름을 부어 집값 상승을 자극할 뿐이다. 특히 구로구·노원구·도봉구, 서초구 등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폭이 더욱 크다. 부르주아 경제학을 떠받들며 수요·공급 곡선으로 현실을 단순화해 보려는 교조적 태도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투기판 열어 놓고는 투기 엄단 엄포

정부와 오세훈은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도 투기는 엄단하겠다고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앞뒤가 안 맞는 태도다. 투기꾼에게 먹이를 던져 주면서 이

를 먹지 말라고 호통치는 격이다.

물론 노동자·서민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100가구 중 6가구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 같은 반지하에서 살아간다. 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인 1인당 14제곱미터도 안 되는 곳에 사는 가구도 100가구 중 약 7가구(6.7퍼센트)나 돼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고시원, 쪽방 등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최저주거기준 가구로 집계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대도시의 주택난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질적인 문제다.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대도시로 점점 더 많은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와 함께 인구도 집중되는 경향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값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리

는 것은 열악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세입자들은 시외곽으로 쫓겨나고,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높아져 통만 커질 뿐이다.

겨우겨우 ‘영끌’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자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로 치솟았고, 한국의 금융 취약성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민간 주택 공급 방식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노동자·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윤 논리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이사벨 링로즈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동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권당인 영국 보수당은 약속했던 성별인정법(GRA) 개혁을 폐기했고, 논바이너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공격에 반대해서 올해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이 상당히 큰 규모로 투쟁적인 분위기 속에 치뤄졌다.

6월 27일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에 1만 명이 참가해 트랜스젠더 혐오에 분노를 표했다.

이번 시위의 규모는 지난해의 갑절이었고, 보수당의 트랜스젠더 권리 공격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보수당은 성별인정법 개혁안을 폐기했다. 이 개혁안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논바이너리[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6월 27일 런던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한 시위 참가자는 보수당의 트랜스젠더 권리 공격이 “우리더러 존재해서는 안 되고 숨어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소셜리스트 위커>에 말했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번 행진에서 전국교원노조(NEU)가 12개의 현수막을 내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노동조합의 이런 지지가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자긍심 행진이 투쟁임을 분명히 했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스톤월 행쟁이 무지막지한 폭동이었음을 부정하지 마라”, “누구의 자긍심인가? 우리의 자긍심이다! 누구의 시위인가? 우리의 시위다!”

프랑스 지방선거 파시스트의 득표는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김준호

프랑스 대선의 전초전이라 여겨진 6월 20일(1차), 27일(2차) 지방선거에서 가장 커다란 패배를 겪은 쪽은 현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롱이다.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퐁블리크 앙마르슈)은 1차 선거 때 전국 평균 11.2퍼센트, 2차 선거 때는 겨우 7퍼센트를 득표했다(프랑스여론연구소 출구조사). 마크롱이 당선한 2017년 대선 1차 투표(24퍼센트)나 2019년 유럽의회 선거(22퍼센트) 때보다 현격히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봐도 ‘전진하는 공화국당’이 3위 안에 든 곳은 공화당과 연합해 출마한 한 곳뿐이다.

마크롱은 2017년 당선 직후부터 대중의 삶을 가차없이 공격했고 큰 저항에 부딪혔다. 유류세 인상 시도가 촉발한 노란 조끼 운동, 몇 달 간 이어진 대규모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지난해 말 보안법 반대 50만 시위 등.

그럴 때마다 마크롱은 군사화된 진압 작전을 공격적으로 벌이고 권위주의적 조치를 잇달아 도입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다. 이런 일들로 마크롱은 인기를 크게 잃었다.

사실 2017년 마크롱의 당선 자체가

유력 파시스트 정치인 마린 르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보 유권자 상당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크롱에 투표한 덕분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마크롱 4년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반감을 보여 줬다. 그리고 마크롱이 “파시즘에 맞선 장벽”이 되기는커녕 선거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음도 드러났다.

권위주의 강화

한편, 마크롱이 위기 때마다 권위주의를 강화한 것은 정치 지형을 우경화시켰고 파시스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마린 르펜과 그의 정당 국민연합(RN)은 사회 불안정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위협적으로 부상했다. 르펜과 국민연합은 마크롱이 탄압하겠다는 이른바 “이슬람-좌파 동맹”에 가장 잘 맞설 세력을 자처하며 성장했다. 그러면서 최선두를 다투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연합은 득표율이 소폭 줄어, 6개 주(州)에서 승리한다는 르펜의 호언장담을 실현하지 못했다. 국민연합은 전국 평균 19(1차)~20퍼센트(2차)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015년 지방선거(27.7퍼센트)나 2019년 유럽의회 선거

(23퍼센트) 때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합이 아직 전국적·기층 수준에서 탄탄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이다.

선거 직전인 6월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시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합은 프랑스 제2도시 마르세유가 포함된 프로방스알프코테다쥐르주(州)의 1차 투표에서 35퍼센트 이상 득표해 1위를 하며 만만찮은 저력을 보여 줬다. 르펜은 내년 대선까지 “전국적 조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기성 우파 정당인 공화당이 전국 평균 27.3퍼센트(‘입소스’ 출구조사)를 득표해 1위를 했다. 이제 내년 대선에서 “파시즘을 저지하는 장벽” 구실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그자비에 베르트랑이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공화당의 성적은 2017년 대선 때 마크롱에게 빼앗긴 표를 일부 되찾은 수준으로, 마크롱의 추락에서 반짝 반사이익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 지역 단위로 봐도 공화당은 기존에 지자 체장을 보유한 곳을 수성한 수준이다.

게다가 베르트랑은 사르코지 공화당 정부 시절(2007~2012)에 노

이런 구호도 올려 퍼졌다. “자긍심 행진은 영리용이 아니니 [기업들의 손 떼라], “너희는 누구 편이나, 경찰은 꺼져라”

라이카 에이더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침해되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권리가 문화적·법적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시위는 우리 권리를 지키고 우리 목소리를 알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경청하고 관심을 기울일 기회인 것이죠.”

시위 참가자인 이실 액티비스트는 자긍심 행진으로 “트랜스젠더 이슈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리가 순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거죠. 할 일이 많아요. 반(反)트랜스젠더 법안을 없애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해요.”

트랜스젠더 혐오

또 다른 시위 참가자 로빈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대놓고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바람에 다른 자들도 안심하고 트랜스젠더를 배척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아요.”

트랜스젠더인 엠마는 시위에 참가해서 “정치적으로 능동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셜리스트 위커>에 말했다.

“자긍심 행진은 100퍼센트 투쟁이어야 합니다. 싸울 기회인 것입니다.”

로빈은 “낙태권과 같은 권리도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죠. 우리가 투쟁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고 말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권리를 얻는 것 이상을 원했다. 완전한 해방과 진정한 변화를 원했다.

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체제 때문에 여러 차별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한 투쟁은 흑인·여성·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체제를 넘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투쟁이 현재 체제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하나다.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권리의 케이크를 나눠 먹으려고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의 권리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 것은 인상적이다. 트랜스젠더 혐오에 맞선 저항은 편견에 찌든 자들을 물러서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커> 2761호 / 번역 성지현

사르코지 정부의 무슬림 혐오와 “국가 정체성” 운운하는 민족주의에서 가장 득을 본 것도 바로 국민전선이었다.

대중적 반파시즘 운동이 시급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좌파는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다.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후보가 출마한 곳에서 (지난 유럽의회 선거보다 출마한 지역구가 많이 줄었다) 5퍼센트 안팎의 득표를 했는데,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멜랑송이 19.5퍼센트나 득표한 것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프랑스 좌파들은 그간 마크롱 정부의 이슬람 혐오와 민족주의에 기회주의적으로 대처하거나 양비론(정부도 이슬람도 모두 문제다)을 퍼 왔고, 인종차별·파시즘에 맞선 대중 운동 건설에 거의 나서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분노와 저항에 효과적으로 접속하지 못하고 분열과 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전열을 정비하고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대중적 반파시즘 시위가 계속 이어져 거리에서 파시스트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전선이 프랑스에서 건설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김승주

이 글은 6월 24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을 개정·증보하고, 청중토론 일부를 덧붙인 것이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러나 그만큼 세상을 잘 알게 됐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2030년 지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걱정거리 네 가지를 물었더니, 기후위기(67퍼센트), 분쟁, 불평등 문제와 함께,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문제(32퍼센트)가 상위에 꼽혔다. 또, 2018년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퍼센트가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본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국가가 언론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런 제안의 일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신문사 같은 전통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도 적용 대상이다. 이외에도 기사나 댓글 게시판을 규제하고 방송의 가짜뉴스를 가중 처벌하는 여당발 법안들이 나와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 이런 시도들이 대중의 적잖은 지지를 받는다. 올해 2월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2퍼센트가 가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혼란스런 마음도 존재한다. 매우 이해할 만하다. 이미 한국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낮은 편이다. 2019년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인터넷 감시와 처벌이 심하다는 것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우파와 국민의힘이 끼어들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파들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말든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 전쟁 위협을 부추기는 주장 등 온갖 우파적 주장이 포함된다. 전두환도 광주항쟁 희생자 모욕과 거짓말로 가득한 자신의 회고록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했다.

국제적으로도 우파들이 자신들의 망언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는 일이 하나의 패턴이 됐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표현의 자



과연? 주류 언론들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해결책으로 언론 검열 강화를 내놓는다.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유 협회'를 설립했고,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학 내 인종차별적 우파 지지자들을 보호하려고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요컨대, 국제적으로 가짜뉴스 현상이 논란이 되면서 국가의 언론 검열이냐 아니면 우파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냐 하는 구도가 생겨났다. 그 가운데는 혼란스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기성 질서의 신뢰 추락

가짜뉴스 규제 강화법을 앞장서서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었다. 2017년 독일은 가짜뉴스 삭제를 강제하고 벌금을 최대 65억 원까지 물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독일에서 코로나19 음모론을 이용하는 극우 세력이 노 마스크(마스크 안 쓰기) 시위를 벌였다. 그 규모가 4만 명에 이르렀다.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던 프랑스의 경우, 파시스트 정치인 마린 르펜은 2017년 혐오 발언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서 그해에 대통령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이는 국가의 법적 규제로는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짜뉴스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 위기 발생의 한 당사자이다. 2008년 이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가 계속됐지만 해결은커녕 코로나19와 기후위기까지 겹쳤다. 각국 정부와 지배자들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에게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그들 사이에서 이진투구를 벌였다. 이런 위기로 정부, 언론, 학계

등 기존 이데올로기 생산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됐다.

이처럼 기성 질서의 권위가 추락하고 무너진 자리에 가짜뉴스가 자라난 것이다.

서구에서는 가짜뉴스를 이용한 극우와 파시즘 운동이 큰 문제거리다. 그들은 제1의 기치로서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는 또한 2000년대 초 미국의 부시 정부가(서유럽 정부들도) '테러와의 전쟁' 명분을 위해 부추기고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리고 여전히 서구 강대국 정부들은 무슬림 차별을 한다. 이러니 국가가 혐오 표현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가짜뉴스를 막아서 자유를 증진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국가 검열 도입의 흔한 명분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가짜뉴스 규제법은 명분과는 정반대 구실을 했다. 지난 3월 국제언론인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가짜뉴스 규제법을 도입한 여러 나라들이 "허위정보 유포를 제한한다는 구실로 정부 비판을 단속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의 한 기자는 병원의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를 보도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 달간 4건을 적발했는데, 모두 반정부 인사의 SNS 게시글이었다.(다행히 이 법은 나중에 폐기됐다.)

여러 전문가들(가령 마르코 밀라노비치 영국 노팅엄대 교수)도 이렇게 지적한다. "많은 정부들이 언론의 자유를 더 광범하게 억제하기 위한 모호한 수단으로 가짜 뉴스 방지법을 활용하는 듯하다."

국가가 언론 검열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일

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세상 수많은 주장들 사이에서 진실을 가려낼 능력도 없거니와, 무엇보다 전혀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본질은 강제력을 사용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반국가·반자본주의 언론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헌법이 언론 검열을 금지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

국가는 진실의 담지자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에서는 언론 엔지오를 중심으로 우려가 크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이 대부분 가짜뉴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지. 국가의 검열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 정의당도 "규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규제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혐오 표현 규제 문제로 가면 찬성하는 진보 진영 입장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국가가 내세우는 명분은 진실이 아니므로 말 그대로 실현될 리 없다.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 문제를 정말 공정한 것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은 결국 노동계급을 겨냥한 제약이 된다. 언론 검열의 권한을 국가에 주고 그것을 강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와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의 운동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 불황과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

은 경찰력 강화 등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도 이런 맥락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한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알아서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SNS 기업들의 검열**이 낳을 진짜 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올해 초 페이스북은 미국 극우 세력의 의사당 폭력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정지시켜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한 영국의 좌파 활동가 45명의 계정과 15개 조직의 페이지를 정지시켰다. 페이스북측은 알고리즘이 실수한 것 같다고 돌려뒀지만 결국 몇 달 뒤 다시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진정한 효과는 여기서 드러난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도 우호적인 다른 매체나 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수천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짜뉴스나 우파 언론들의 망언 같은 문제를 그냥 두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반동적인 언론과 주장에 맞서 아래로부터 저항해야 한다. 러시아의 혁명이 트로츠키는 1938년 국가의 언론 검열에 반대하면서, 반동적 언론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언론을 이용해 스스로 조직해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적인 주먹에 의존"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진실을 가려 대중을 속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요한 행위자인 것이다.

우파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나?

국민의힘 등 우파들은 집권 민주당의 언론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인다. 국제적 우파들의 레퍼토리 그대로이다.

그러나 냉전적 대결이나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 연사나 내뿜는 우파들의 표현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까? 가령 지난해 6월 ‘신 전대협’이라는 우파 단체가 전국 대학들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파측 주류 매체들은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 억압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그 사건의 경우에도 표현이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좌파가 나서서 국가 단속을 주장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반대로 투쟁해야 할 대상인 우파에게도 “말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나서서 옹호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태도였다.

또 다른 사례로, 2015년 있었던 프랑스의 신문 샤를리 에브도 편집부 살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무슬림을 조롱하고 편견을 고무하는 만평을 실었다가 총격 공격을 당했다.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러나 이 공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얻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NPA)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며 총격을 비난하기만 했다. 이는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조롱을 진보·좌파가 변호해야 한다는 셈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제국주의와 관련된 문제였다. 프



우파 대자보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우파들. 2019년 4월 이연주 전 의원

랑스 제국주의가 조장한 인종차별에 대한 천대받는 측의 (그릇된 방식의) 항의였던 것이다.

‘누구의’ 표현의 자유인가?

이처럼 우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는 표현의 자유를 **추상적**으로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로만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어떤 권리가 법 조문에 적혀 있고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구입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은 누릴 수 없는 자유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법적으로는 동등하게 말할 자

유가 있다. 그러나 부자들은 훨씬 더 널리, 더 효과적으로 말할 자유가 있다. 언론사에 광고를 싣거나 신지 않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언론사를 세울 수도 있고, 정치인들을 통해 말하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파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억압을 지지하며, 나아가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말할 기회(표현의 자유)를 찾아가고 침해한다. 그럴 “자유”를 옹호해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이겠는가?

계급으로 분열한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누릴 자유와 권리도 계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무엇을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를 물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표현의 자유의 역사는 언제나 투쟁의 역사였다. 국제 노동계급 운동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지배자들과 우파들이 아래로부터의 반론이나 항의에 시달리지 않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가 법조문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성과였다. 자본가 계급은 자유, 평등, 우애 같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사회는 여전히 계급 사회였고, 자본가 계급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없는 것인 양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보편적 권리(자유)들은 실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본가 계급이 지배계급이 된 후에

도 보통선거권이 노동계급이 쟁취해야 할 몫이었듯이,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였다. 자본가 계급은 표현의 자유를 독점하고 억압하는 계급이 됐다. 반면, 노동계급은 법조문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매우려고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투쟁은 바로 1907년부터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졌던 미국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의 표현의 자유 투쟁(Free Speech Fight)이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됐던 전쟁 기간에 거리 곳곳에서 정부와 부패한 사용자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경찰은 폭력으로 진압했다. 5000명이 넘는 연설가가 한꺼번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

저항의 역사에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

들기 위한 투쟁들은 중요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매우 중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파들의 주장처럼 누구도 무엇이든 말할 자유, 그래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모두 할 자유 같은 게 아니다.

진정한 언론·표현의 자유는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고 투쟁으로 확대하거나 지켜가는 것이다.

곤질기게 지배자들을 폭로하고, 사상의 충돌을 빚고, 노동계급의 상호교류와 투쟁 경험이 더 많아지도록 고무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계급에 진실을 말하는 수단인 혁명적 언론과 조직을 곤질기게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청중 발언

한 참가자는 국가의 혐오 표현 규제가 오히려 혐오 세력에 맞서려는 좌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 혐오로 몰아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좌파 당수였던 제러미 코빈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 혐오로 몰려 징계를 받았는데, 유럽 각국 지배자들도 같은 프레임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 시위로 몰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인종차별 국가이고,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후원해 왔는데 말이죠.

영국에서는 1965년 블랙파워 운동의 영향으로 인종적 선동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기소당하고 감옥간 첫 인물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블랙파워 활동가였던 마이클 엑스였습니다. 백인에 대한 혐오선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1930년대 초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좌파 내 논쟁을 돌아보며, 자본주의 국가가 중립적인 기구라는 환상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독일에서 나치의 발언권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좌파들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이마르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나치도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회민주당의 일부 좌파와 공산당은 국가가 나치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모두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에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 때문에 결국 좌파를 향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컨대 국가 문제가 핵심입니다. 진정한 대안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광범한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서 나치에 맞서 대결하고 위력적인 세력으로서 시위를 하면서 나치가 감히 몇몇하게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치가 연단에서 발언할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힘을 보여 줌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양당의 위선을 꼬집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은 역사왜곡처벌법을 추진하면서 과거 우파 정부 하에서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교과서 탄압이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비판했으면서, 정권을 잡더니 입장이 바뀐 것이죠.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세계적인 체제 위기와 정당성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파에 대한 공포와 그들의 악선동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진보 진영의 일부를 포섭하는 데에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보 진영의 일부가 우파 정부 하에서는 언론 통제에 반대했다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부의 이런 말 바꾸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노동계급이 추구해 온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흠집을 내려 합니다. 이들 모두는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 참가자는 국가적·국제적 강화를 위해 우파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은 법제화된 검열을 말라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서 전술적으로 경직된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사회주의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유하[위안부 피해의 진실을 왜곡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국가 규제에 반대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를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관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에서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기소돼 재판 받을 때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재판장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서 국가가 약한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힘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용해서 우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는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식인들이 이끈 농민 군대의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마오쩌둥

이정구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국가 관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완성할 것이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중국 인민의 일부일 뿐일 것이다. 경제 성장으로 살 만한 사회를 완성했다는 중국 지배자들의 공식 발표와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온갖 축하 행사의 이면에는 심각한 빈부 격차(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 민주적 권리 공격(최근 사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노동자 투쟁과 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인종·민족 억압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중국 국가 관료는 중국 사회를 이끄는 근간이 바로 중국공산당이며, 이 당은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중국 바깥의 많은 좌파들도 중국공산당이 통치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여긴다. 하지만 중국 지배 관료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처음에 불세비키 정당을
모델로 삼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창당한 배경은 두 가지 요인들이었다.

하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다.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할퀴고 분할해 갈 때 신생 노동자 국가 러시아의 외부 인민위원 카라한은 제정 러시아 국가가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자 국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엄청나게 커졌다. 중국공산당 창당의 두 주역 중 한 명인 리다자오(李大钊)는 일찍이 불세비키의 존재를 중국에 소개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혁명을 옹호했다.

다른 한 요인은 점차 확대되는 중국 노동자·농민 투쟁이었다. 대표적인 투쟁은 제국주의와 이에 유착한 군벌에 반대해 일어난 1919년 5·4운동이었다. 이 운동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당시에 외국인 조차지에서 상당 규모로 형성된 노동자들이 그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홍콩 부두 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이었다. 중국공산당 창당의 또 다른 주역인 천두슈(陳獨秀)는 5·4운동 당시 베이징에서 유인물을 반포하다 유치장 신세를 진 뒤 베이징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상하이로 가서 노동운동에 전념했다.

1921년 창당 당시 중국공산당의 당원 수는 50여 명뿐이었다. 그러나

1926년에는 5만 8000명으로 늘어났다. 1920년대에 노동자 투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주들에 맞서 농민 운동도 늘어난 덕분이었다. 1921년 49건이던 파업 횟수는 1926년 535건으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파업 참가자 수는 10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5배 이상으로, 총파업 일수는 155일에서 2335일로 15배로 증가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혁명에 특히 레닌과 트로츠키가 관심이 많았다. 레닌이 살아 있는 동안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은 마링과 보이틴스키 등을 보내어 중국공산당의 활동과 진로 등에 대한 논의를 도왔다. 창당 초기에 선전 단체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전술 입당하도록 해 노동자 투쟁에 관여할 기회를 붙잡았던 제1차 국공합작이 대표적 사례였다.

1925~1927년
중국 혁명의 비극

레닌 사후 스탈린이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을 장악하면서 중국공산당을 민중주의(중간계급들 쪽으로의 타협) 전략으로 몰고 갔다. 스탈린은 중국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므로 중국공산당은 부르주아지(구체적으로 국민당)를 지원하는 구실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정식화한 것이 ‘네 계급 블록’론이었다. 국민당을 노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자본가 등 네 계급의 ‘혁명적 연합’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에 충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27년 상하이에서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무장 봉기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제 스탈린이 지배하는 코민테른은 파업 노동자들이 장제스의 군대에 무기를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장제스 군대는 파업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학살했다. 이런 학살이 벌어지기 몇 달 전 스탈린은 장제스를 코민테른 상임 간부 회의에 포함시켰다! 중국공산당은 1927년 7월 우한의 국민당 좌파에게서도 똑같은 배신을 당했다. 중국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어야 한다고 강변하며 공산당의 구실을 부르주아지의 보조기구쯤으로 제한했던 스탈린의 지시를 따른 결과였다. 트로츠키는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연속혁명론이었다.

상하이 혁명 패배 뒤 스탈린은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적 과오를 덮으려고(그리고 소련 국내에서는 부하린의 당내 우파를 숙청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크게 약화된 공산당에 의한 무력정변을 도모하는 초좌파주의로 나아갔다. 이런 초좌파주의 노선은 단지 중국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사회파시즘으로 규정했다(사회민주주의 정당도 파시즘 정당의 변형태일 뿐이라는 주장).

리리싼주의로 불리운 중국의 초좌파주의는 객관적 조건도, 주관적 준비도 없이 소비에트 건설과 무장 봉기를 시도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광둥 소비에트’(님 웨일즈의 《아리랑》의 배경이 된 사건), ‘해륙풍 소비에트’, ‘추수 봉기’ 등이 시도됐지만 어느 것도 소비에트나 봉기가 되기는커녕 성공하지 못했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무턱대고 파업이나 무장 투쟁을 벌이도록 하여 고립과 탄압을 자초했다.

장제스가 공산당을 근절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자 공산당은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피신했고, 아예 서북부의 오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일시 존재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1931년에 등장했던 장시성의 루이진 소비에트를 최초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에트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의 형태인 진정한 의미의 소비에트가 아닌 일단의 무장 집단이 통치하는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공세를 피해 연안으로 도주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를 “대장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부르지만, 마오쩌둥 자신도 그것이 자신이 원한 바가 결코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중국공산당이 지지 기반이던 노동자들을 버리고 산간벽지로 들어가면서 당의 성격도 노동자 정당에서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이끄는 농민 게릴라 부대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을 추종하던 왕밍(본명 진소우)과 그 후원자 미프의 세력은 위축되고 마오쩌둥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1935년에 열린 쑨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실권을 쥐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도시 중간계급 출신 지식인들이 지도하는 농촌 게릴라 부대는 제2차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1949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했다. 1949년 혁명을 통해 소련과 같은 사회 구조를 지닌 중화인민공화국이(몇 해 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탄생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 기구의 핵심이 됐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고 환호하는 한편, 당시 세계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격과 그 체제의 주역인 중국공산당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당시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민족해방 혁명으로 등장한 중국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보고 중국공산당의 구실을 혁명적으로 본 다수파인 쑹수즈 그룹과 중국을 모호하게 관료 집산주의로 본 소수파인 왕팡시 그룹으로 분열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올바른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저항하

는 노동자와 농민을 탄압하고 체제를 지키는 반혁명적 조직으로 바뀌었다.

중국 현대사에서 노동자 저항이 거대하게 벌어질 때마다 중국공산당은 투쟁의 대상이 됐다. 1966년 후난성의 노동자들로 이뤄진 성무련(省無聯; 후난성 무산계급혁명파대연합위원회)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체제를 비판하며 “관료 부르주아지의 타도”와 옛 국가 기구의 철저한 파괴를 주장했다. 그들은 반동 지지 세력으로 바뀐 ‘인민해방’군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항쟁 때도 노동자와 학생들은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 타도를 외쳤다.

정치와 경제의 매우 밀접한 관계

오늘날 중국 대학생들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는 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물론 중국공산당원은 되고 싶어 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당원증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하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통합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추진 속도나 방향을 두고 형성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치적 갈등으로 쉽게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일치단결돼 있고 한몸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파를 형성하면서 종종 서로 갈등을 빚는 집단이다. 1958년 대약진운동을 두고 벌어진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와 덩샤오핑, 류샤오치)의 대립, 1978년 개혁·개방을 두고 벌어진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 등이 그 예들이다.

지배 관료들이 분열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은 아래로부터 저항이 벌어지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1966년 문화혁명과 1989년 톈안먼 항쟁은 지배 관료가 낱카롭게 내분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최근 국가주석 시진핑과 총리 리커창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 관측한 ‘국가 주도냐, 시장 주도냐’ 하는 갈등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마윈을 길들이려 한 일은 분명 ‘국진민퇴’(국유 기업은 전진하고 민간 기업은 후퇴한다)는 뜻으로, 국유 기업 확대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비록 지금은 시진핑의 통제력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겠지만, 미·중 갈등이나 국내 정책의 실패로 통제력의 위기가 나타나면, 경제 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배계급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그 결과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식 ‘마르크스주의’에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이라는 사상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조차 억압해 노동자를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를 옹호하는 면만 있을 뿐이다.

중국 사회가 서방 사회들에 비해 더 나은 사회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좌파들은 중국공산당에서 뭔가 가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 할 것이다. 과거에 많은 좌파들이 이런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미 오래 전, 마오쩌둥이 통제했던 중국공산당에게도 고전적 의미의 계급의식 같은 것은 없었다. 이미 도시 중간계급과 농촌 농민의 정당이던 중국공산당은 1949년 신중국 등장 이후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다.

중국에서 미래의 노동자 투쟁은 중국공산당과 그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공산당 100년 — 세계적인 자본주의 정당으로의 놀라운 변신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얼마 전 주영 중국 대사 정쩌광이 런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를 참배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기렸다.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역사는 누가 봐도 놀랍다. 반(半)식민지 상황의 상하이에서 박해받던 한줌의 급진적 지식인 집단이 세계 제2 경제 대국의 집권당으로 성장했으니 말이다.

중국공산당이 승리한 정치적 동학은 비교적 분명하다. 창당 몇 년 만에 중국공산당은 영국령 홍콩 경찰의 유혈 진압이 촉발한 거대하고 전투적인 노동자 투쟁의 핵심이 됐다. 이후 공산당은 민족주의 운동의 핵심 세력인 장제스의 국민당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1927년 장제스는 공산당을 공격해 공산당 활동가들을 학살했다.

도시 밖으로 피신한 공산당은 1930년대 중반 마오쩌둥이 이끄는 농촌 게릴라군으로 서서히 재부상했다. 마오쩌둥은 1937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제창적인 중국 정복 시도[중일전쟁]에 대항하면서 수완을 발휘해 장제스를 갈수록 수세로 몰아넣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을 통제하려 들던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신흥 초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책략을 부렸다.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들고 일어섰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최우선 목표는, 19세기부터 중국을 분할 점령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려 했지,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토니 클리프는 1957년 이렇게 썼다. “마오쩌둥 치하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낙후하고 자원이 빈약한 농업 기반 위에서 대중을 들들 볶아서 장엄한 경제·군사 기구를 수립하려는 지배층의 노력이다.”

비슷하게 이사벨라 웨버는 중요한 신간 도서 《중국은 어떻게 충격 요법을 피해갔나》에서 이렇게 썼다. “마오쩌둥 시대에 가격 체계는 도시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농촌에서 쥐어짜는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 농산물 가격과 공산품 가격은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게끔 책정됐다. 농산물 가격은 가



100년 전 급진적 지식인들이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오늘날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집권당이 되었다

치 이하로 억제됐다. 농민은 도시 노동자와 같은 시간을 일했지만 물질적 생활수준은 훨씬 열악했다.”

여러 격변이 있었지만 이런 국가자본주의 건설 노력 덕분에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할 즈음에는 현대적 제조업 경제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중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1949년 혁명 이래로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 그래서 마오쩌둥 사후 최종적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덩샤오핑은 시장 메커니즘에 더 기대어서 농업 생산을 늘리고,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에 개방하기로 했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 하에서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첫째, 웨버가 보여 주듯이, 중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환멸에 빠진 많은 동유럽과 중부 유럽 공산당 출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고삐 풀린 시장 가격 체계로 하루아침에 전환하는 이른바 “충격 요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결의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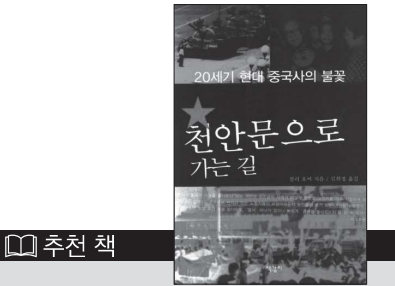
둘째, 중국 정부는 서방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세계 시장을 위한 저비용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중국은 결국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 정치인들과 이데올로그들에게는 분하게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오히려 현 국가주식 시진핑 하에서 중국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강경해지고, 지정학적으로 더 적극적이 됐다. 국내에서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했다. 덩샤오핑은 주저했던 일들이다.

더 중요한 점은 공산당·국가 관료들이 국유 기업을 통해 직접적으로든, 명목상 민간 기업들을 통해 간접적으

로든 중국 경제를 계속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자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축에 들지만, 여전히 노골적으로는 은밀하게든 중국 공산당과 얽혀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시진핑의 “독재”로부터 21세기를 정취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개미국 체계는 중국공산당의 계속되는 지배력에 패념치 않는 듯하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저축에 접근하려고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와 서구 자본주의의 밀월은 끝나지 않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61호 / 번역 김준호



추천 책

천안문으로 가는 길
20세기 현대 중국사의 불꽃
찰리 호어 지음, 김희정 옮김.
책갈피, 263쪽, 10,000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정부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증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영국 노동당의 새 전략 반보수 연합이 제대로 된 대안일 수 있을까?

찰리 김버

6월 17일 체셔앤아머섬 선거구 보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승리하자 잉글랜드 남부에서 보수당이 지켜 온 표밭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당 소속 총리 보리스 존슨을 다음 선거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독립주의자들이 “진보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되살아나게 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집권 보수당의 처참한 패배다. 52퍼센트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득표율을 전보다 30퍼센트포인트 올려, 보수당이 차지해 온 과반수 득표(1만 6000표)를 뒤집고 8000표 차로 보수당을 눌렀다.

1974년 이 선거구가 생긴 이래 열세 번의 선거에서 보수당이 과반수 득표를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 득표율은 고작 36퍼센트였다.

표를 움지인 구체적 쟁점 하나는 HS2 고속철도 노선 건설이었다. 이 사업이 지역 환경 곳곳을 파괴하고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사임

지난번 2019년 총선 때 이 지역구에서 뽑힌 보수당 의원은 HS2 사업에 반



보궐선거 승리 후 자유민주당 당수가 보수당의 아성을 상징하는 푸른벽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했고 그 때문에 장관직에서 사임했다. 이번 후보는 그 사업을 지지했다.

2019년 총선 때 HS2를 지지했던 자유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 성공했다.

농촌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사업 수정안도 원성을 자아냈다.

자유민주당 인사 브리짓 폭스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많은 가족들이 그램어 스쿨[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비평준 중등학교]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왔고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학교와 시험, 대학 생활에 타격을 줘서 이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peterwalker1999(트위터)

더 일반적으로는 보리스 존슨을 향한 불만 가득한 분노의 물결이 있었다. 체셔앤아머섬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했다.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는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남아 있는 불만을 어느 정도 반영했을 것이다.

노동당 지지는 폭삭 무너졌고, 역대 보궐선거 중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다.

노동당 후보 나타샤 판텔릭이 얻은 622표는 해당 선거구의 노동당 당원 수와 거의 같다는 소문도 있다. 판텔릭은 토니 블레어에게서 받은 지지 선언을 힘껏 과시했었다.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였던 2017년 총선에서는 5명 중 1명이 노동당을 찍었다. 이번에는 60명 중 1명꼴이었고 녹색당에 뒤쳐졌다.

자유민주당의 승리에 결코 환호해서는 안 된다. 이는 2010년 이후 보수당과의 연립정부에 참여해 10년간 긴축을 가능케 한 정당의 승리다.

자유민주당은 여전히 기업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다. 가히 기업주들의 ‘2중대’의 살아 움직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보수당보다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지출안을 내놔다. 그리고 심지어 추가적인 국민투표도 열지 않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노동계급 정서를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다. 체셔앤아머섬 선거구는 영국의 533개 선거구 중 531번째로 생활 조건이 나쁜 곳이다[가장 부유한 지역의 하나라는 뜻].

자유민주당이 보궐 선거에서 거두는 승리는 많은 경우 정부에 대한 매우 모순된 분노가 반영된 결과다. 지속적인 효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노동당이 다른 정당들과 손잡고 보수당에 맞서는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친노동당] 저술가 폴 메이슨은 노동당의 선거 성적 부진을 “노동당 관료들이 원하든 말든 진보 연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로 본다.

그러나 그런 연합은 노동당 내 친기업 정치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자유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좌파적 총리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연합이 노동조합 투쟁과 의회 밖 투쟁으로 형성된 공론장에서 정치를 빼앗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직을 얻기 위한 소수 정치인들의 합의가 중시될 것이다.

노동당은 이미 친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엮매여 있다. 자유민주당과의 협상은 그 과정을 가속시킬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60호 번역 강미령

영국-러시아 해상 충돌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애국주의 강화하는 영국 정부

찰리 김버

6월 23일 영국과 러시아 군함이 흑해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공세적 애국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제국주의적 경쟁이 어떻게 끊임없이 전쟁 위험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정찰선이 영국 구축함 디펜더를 몰아내려고 경고 사격을 가하고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디펜더함은 크림반도 해역에 진입해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크림반도 남단 피오렌트곶 해안의 영해를 3킬로미터 침범했다.

크림반도는 2014년 3월 러시아에 점령·합병됐다.

다음 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항로가 “전적으로 적절”했으며 해당 구축함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디펜더함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막 출발한 상태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6월 22일 디펜더함

선상에서 만나 방위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우크라이나 해군력 증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우크라이나 해군 인력 훈련, 해군 기지 신설, 샌다운급 기뢰탐색함 두 척 구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러시아 지배자들의 화를 돋울 것이 분명했다.

영국 정부에는 매우 편리하게도 BBC의 국방전문기자 조너선 빌과 <테일리 메일> 기자 한 명이 때마침 디펜더함에 승선해 있었다. 보수당이 과거 영국 제국의 영광을 다시 떠올릴 순간을 마련하려 했다면, 러시아와 대결하는 것만큼 완벽한 계기가 없었을 것이다.

영국 국가가 분리·독립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사정에도 딱 맞았을 것이다.

확실히 영국 정부는 끊임없이 애국주의를 북돋으려 한다.

영국인들은 6월 25일이 “하나된 영국, 하나된 국민의 날”이라는 말을 듣는다. 어린이들에게는 “우리는 영국인. 꿈이 하나 있어요, 온 국민이 멋진 팀으로 하나되는 꿈”이라는 가사가 달린

노래가 장려될 것이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사격을 가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너선 빌의 보도는 이와 달랐다. 군대의 입장을 받아써 온 이 고분고분한 기자조차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 군함에 따라 붙은 러시아 경비함 두 척이 우리의 항로를 강제로 틀려 했다.

“무전으로 갈수록 적대적인 경고를 보냈다.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발포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군함 상공에 20기가 넘는 러시아 전투기가 날아다녔다. 러시아 해안경비함으로부터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총성을 들었다.”

디펜더함은 첫 임무를 수행 중인 영국의 새 항공모함 퀴엘리자베스함을 지원하는 함대의 일부이다. 이 기동함대에는 잠수함, 공격기, 영국과 미국의 육·해군병이 함께 투입된다.

항모타격단21(CSG21)이라 불리는 이 함대는 남중국해 등 분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6개월 동안 항해하기 위해 지난달 영국에서 출발했다.

국방위원회 의장인 보수당의 토바이어스 엘우드도 6월 24일 BBC 인터뷰

에서 서방 국가들이 지나친 “위협 회피 성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축함 한 척을 대만해협으로 지나가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중국을 격분케 할 행동이다.

긴장

디펜더함은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려 가는 길에 함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러시아와 대치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CSG21을 두고 “해외로 보낸 해군·공군 전력 중 사상 최대”라고 했다.

그러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파견한 병력이 더 컸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한 세대 만에 최대”로 말을 바꿨다.

CSG21 사령관 스티브 무어하우스는 지난 6월 22일 트위터에 “밤낮없이 항상 출동 준비가 된 5세대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고 올렸다.

같은 주 영국과 미국의 F-35B 등 전투기 18기가 실전에 투입됐다. 무어하우스는 “의미심장한 순간”이라고 했다.

무어하우스는 이렇게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반자들과 함께한 일련의 합동 훈련과 공조로 영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맡아 왔다. 이제는

해양 기반 공중 전력으로 공동의 적에 강편치를 날릴 준비가 돼 있다.”

퀴엘리자베스함의 비행단 사령관인 제임스 블랙모어 대령은 “10년 전 리비아 작전 이후 처음으로 영국 해군이 해상 타격 작전에 복귀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군 군용기가 외국 항공모함에서 전투 임무를 맡은 것은 1943년 남태평양의 빅토리어스함 이래 최초다. 영국 해군, 영국 공군, 미국 해병대는 마치 한 몸처럼 통합돼 있으며 우리가 처음 함께한 이후 얼마나 친밀해졌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중국·러시아와 첨예하게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는 세계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 동맹이다.

보수당은 자신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칼레에서 영국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난민들한테는 그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60호 번역 김동욱

전국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위한 인력충원을 못박다

노사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투쟁으로 성과 거두다

신정환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6월 19일 치른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는 85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전 조합원의 무려 76.5퍼센트 찬성). CJ대한통운 소속의 한 노동자는 “분류 작업만 안 해도 과로사는 사라질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 왔다. 적게는 하루 2시간, 많게는 5~6시간이나 소요되는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택배 노동자들은 무상으로 분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늘었고, 과로사 노동자가 속출했다. 추석 전후로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자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충원을 약속하고 추석을 넘겼지만, 그 후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올해 1월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분류 작업을 택배사들이 책임진다는 점이 명시됐다. (“택배 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전국적인 노동계급 유대감의 효과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더 나아가 2차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 제의 시점이 빨리 확정되길 바랐지만, 정부와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 충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력 충원 완료 시점을 내년 6월로 늦추려 했다. 특히, 택배사들은 인력 충원을 이유로 올해 4월에 택배 요금을 올려놓고도, 계속 분류 작업을 시켰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 택배 노동자 5명이 추가로 과로사 했다.

파업 효과와 계급 유대감

분노한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택배노조는 6월 7일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했고, 9일부터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약속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우리를 개차반으로 여긴다”고 성토했다.

택배 배송이 일부 차질을 빚는 등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노동계급 정서는 계속 택배 노동자 투쟁에 우호적이었다.

물론 택배사들은 인력 충원 완료 시점을 한사코 늦추려 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미 분류 작업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며, 인력 충원 합의 자체를 거부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1차 합의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6월 14일부터 여의도우체국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6월 15~16일 상경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지만, 각지에서 모인 파업 노동자 4000여 명은 경찰의 방해로 뚫고 집회를 성사시켰다. 상경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결국 이번 2차 합의는 분류 인력 충



정부와 경찰의 방해로 뚫고 6월 15~16일 상경 집회에 파업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였다. 자신감과 투지의 반영이었다

원의 완료 시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못박아야 했다. 정부와 사측이 바란 것보다 6개월을 앞당긴 것이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는 9월 1일까지 각각 분류 인력 1000명씩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 기사들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대리점주 횡포를 막을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하는 성과도 거뒀다.

유리한 합의 사항일지라도 그것을 이행케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택배노조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암묵적 메시지이다.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노동강도 높아지고, 백신 휴가마저 차별

김지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6월 18일과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휴가 차별에 항의했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장 내 식당 25곳 중 일부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단에 다양화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이 인력을 늘리지 않아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노조의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는 한 끼에 제공하는 식단이 대체로 두 종류였는데, 지금은 5~6개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더 필요해졌지만 인원은 그대로여서 지금 노동자들은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두부만 구우면 됐던 것을 이제는 두부에 계란을 묻히고 각종 채소를 넣어 굽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더 필요한데도 회사는 기존 인원으로 다 소화할 수 있다며 강행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노동강도가 아닙니다. 과로사가 생길 것이고 안전사고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올해 안에 모든 식당을 공사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강도 강화가 식당 전체로 확대될까 봐 우려한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는 100여 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데만 혈안인 것이다.

“백신 휴가 동등히 적용하라”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사무직에게는 이를, 식당 노동자에게는 하루만 쉴 수 있게 했다. 이에 식당 노동자들은 동등한 백신 휴가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건강보다 이윤을 더 우선한다. 지난 4월에 식당 노동자 10여 명을 포함해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에도 사측은 이윤을 우선하며 공장 가동에만 급급했었다. (관련 기사 본지 366호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육체 노동을 해서 사무직보다 몸이 더 힘듭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해요. 10킬로그램 짜리를 들어서 들고 하지만, 바쁘다 보면 혼자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케아 프랑스, 노동자 400명 불법 사찰해 벌금형

프랑스 법원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가구 체인점 이케아에게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케아 프랑스는 입사 지원자들의 뒷조사를 위해 전과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불법 사찰을 당한 직원들은 약 400명에 이른다.

2주 전, 이케아 프랑스의 전 위험관리 책임자 장 프랑수와 파리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만 유로[약 1300만 원]를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한 직원이 신형 BMW 컨버터블을 어떻게 구매할 여력이 됐는지 알고 싶어했으며, 보르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왜 “갑자기 시위대가 됐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케아 프랑스 전 최고 경영자 장 루이 바요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가구 왕국의 추한 민낯이 또 드러났다’

5만 유로[약 700만 원]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바요가 판결에 “충격을 받았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사유 법정 피고석에 앉은 15명 중에는 최고 경영자들과 전직 매장 관리자들이 있었다.

경찰 4명도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 재판은 2009~2012년 동안 벌어진 이케아 프랑스의 직원 감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매장 관리자 파트리크

소아비는 경찰로 일하는 친척을 통해 어떻게 개인 정보를 수집했는지 진술했다.

소아비는 경찰관 알랭 스트라보니에게 이케아 입사 지원자 49명을 “잠깐 봐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그중 3명이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소아비는 또 다른 지원자 68명을 조사해 달라고 했고 그중 5명을 떨어뜨리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너무 순진했고,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한 번 이 시스템에 발을 들인 뒤에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

이케아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데 들인 연간 비용은 거의 60만 유로[약 8억 원]에 달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60호 번역 김지혜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양효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 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가하게 됐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센터 노조는 7월 1일 3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파업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6월 10일 파업 첫날 집회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생애 첫 파업을 하던 2월에 원주로 왔을 때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지만, 오늘은 끝장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자 친사용자 언론들은 직접고용 요구가 불공정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는 직접고용에 반대했고, 자기 조합원들을 파업 파괴자("대체인력") 구실로 몰아넣었다.

이는 정규직 노조 내에서 능력주의와 개인주의적 경쟁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파업 중단과 정규직 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며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협의회에 참여해야만 논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직접고용에 대한 이사장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 갈등'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중단 요구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발상"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이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장 단식소를 집어 치우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이틀 만인 6월 16일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마땅히 직접고용 해야 한다 수년간 핵심 업무를 해 온 고객센터 노동자들.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파업 집회

가 협의회에 들어오겠다고 하자 공공운수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의 요구가 부당하다면서도 결국 김용익 이사장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데에 마지못해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때 기층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별 성과도 없이 파업을 종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꽤 제기됐다고 한다.

사실 1차 파업 때도 공공운수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는 시민사회단체 중재 시도에 기대를 걸자며 조합원들에게 파업 종료를 설득했다. 당시에도 대다수 조합원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파업을 접는 것에 반발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단 측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파업이 중단되자 공단 측은 전

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공단 측은 직접고용 거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데도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가 대화 테이블에 참가하게 됐다고 파업을 중단하는 것은 실책이다.

사실 공단 측이 협의회에 정규직 노조를 끌고 들어온 것은, 고객센터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가 관철되기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협의회는 공단 측 2명, 공단이 선임한 전문가 5명,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로 이뤄져 있다. 이중 3분의 1인 공단과 정규직 노조가 이미 직접고용을 반대한다. 전문가들도 단일하지는 않겠지만 공단 측이 선임했기 때문에 그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고객센터 노조의 의견이 관철되기 힘든 구성이다.)

결국 공단 측은 파업을 중단하도록 유도한 상황에서 협의회 논의를 통해 고객센터 노조에 후퇴를 압박하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협의회 3, 4차 회의에서 공단 측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계열사나 자회사 전환 등 또 다른 방식의 간접고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교섭 우선주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침해를 흔히 동반한다.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협상한 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파업 중단을 통보했다.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소수가 건보 본사 로비에서 농성하며 다수 조합원들과 괴리된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상황을 알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

노조 지도부가 '가다 서다' 파업을 반복하는 데에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중재와 대화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게다가 협상 상대인 김용익 이사장이 보건의로 단체들을 포함한 엔지오들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내 개혁파 인사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직접고용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공공병원, 복지 확충 등)에서 나름 개혁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민사회 단체나 민주당 개혁파(예컨대 을지로위원회 등)를 통한 중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김용익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심분 이용해 고객센터 파업을 주저앉히는 데 주력했다.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단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고객센터 노조

지도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다가 언제든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 성과 없는 파업 종료가 반복되면 조합원들은 김이 빠질 것이다. 파업은 "주머니칼처럼 언제든 간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 지도부가 투쟁을 진지하게 밀고 나아갈 태세를 보여 줘야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와 투지도 유지될 수 있다.

고객센터 노조가 강력하게 투쟁하는 동시에 연대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모두의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지도부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산하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문제적 태도에 대해서 올해 2월 이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분열을 우려해 해야 할 비판을 회피해서는 보수파에게 유리한 세력관계가 조성된다.

문제인 정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말로는 노동계를 달래려 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실질적 양보를 하고 있지 않다. 택배 노동자들이 노사합의로 약속받은 것을 실제 이행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서 성과를 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층 투쟁을 강력하게 전진시킬 때만 개선을 쟁취해 낼 수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파업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연대를 확대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